

2026년 7월, 출범 확정 제물포구·영종구 서구·검단구		보 도 자 료		이제는 인천입니다 2025 APEC INCHEON
배포일자		2024년 5월 9일(목) 총 3매		
담당 부서	토지정보과	담 당 자	• 토지관리팀장 • 담당자	서정하 ☎440-4561 황인태 ☎440-4564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

- 2025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 1년 연장, 신고 의무는 유지 -
- 보증금 6천만 원·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이 대상 -

인천광역시가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 등으로, 실거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닌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인 만큼 홍보를 통한 자발적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부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연장을 결정했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 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7월부터는 모바일 신고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제도기간 연장과 관계없이 신고 의무는 유지된다”고 강조하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확인 일자 자동 부여를 통한 임대차 권리보호 등 여러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제도 정착을 위한 시민분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시는 확정일자 부여 신청과 혼동해 주택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붙임> 주택임대차신고제 홍보 포스터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됩니다 ('25년 5월 31일까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 신고 의무인

임대인 +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신고 대상

아래 ①, ②, ③ 모두에 해당될 경우

- ① '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 ②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③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 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 신고 방법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온라인신고

※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의 신고로 간주

✓ 제재 사항

신고 의무 위반 시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 1533-2949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rtms.molit.go.kr>

또는

관할 기초지자체(읍면동)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